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33
----------	------

제출연월일: 2021. 11. 1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2021. 1. 12.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조례 등 19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나. 중구 주민감사 청구 청구 조례 나이 및 주민수 변경(안 제17조)

- 현행: 19세이상 주민 199명
- 변경: 18세이상 주민 150명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자료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9139호, 2021. 10. 21.)

라. 입법예고: 2021. 10. 12. ~ 11. 1.(20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을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95조제3항 및”을 “제117조,”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제정되는”을 “제정 또는 개정되는”으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를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로,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0조(「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을 “법 제3 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12조(「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3조(「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15조(「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을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16조(「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행정동”으로 한다.

제17조(「울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로, “19
세”를 “18세”로, “199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18조(「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한다.

제19조(「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
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 -----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제35조(위탁관리) ① ----- ----- ----- ----- 제117조, ----- ----- ----- -----

<p>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p> <p>-----</p> <p>-----</p> <p>-----</p> <p>-----</p> <p>-----.</p>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제정되는 조례 등의 비용 추계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 제정 또는 개정되는 ----- ----- -----.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 -----. ----- ----- -----.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1. 「지방자치법」 제150조-----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
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	-----
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
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조례) ① (생략)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②-----
<u>울산광역시</u> 중구의회 의장(이하	----- <u>제32조제6항</u> 후단에 따라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	<u>울산광역시</u> -----
례의 전문에는 의결을 얻은 사실	-----
과 <u>법 제26조제6항</u> 후단에 따라	-----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 <u>법 제32조제6항</u> -----
서명한 후 의회 직인을 찍고 그	-----
일자를 적는다.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 ----- ----- ----- -----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사무를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 ----- -----

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
건소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향토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
문화의전당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동
을 둔다.

② (생략)

-----.

제10조(설치) ①-----
----- 제126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 ----- -----.
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법」 제102조-----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동의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 ----- ----- ----- ----- ----- -----.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	2. 행정동----- ----- -----
· 분합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1조-----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①「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199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①「지방자치법」 제21조----- ----- ----- 18세 -- ----- 150명 -----.
---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 ----- ----- -----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방자치법</u> 」 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제156조----- ----- ----- -----.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

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

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

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8092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이봉근
- 연락처: (052)290-3091